

보험설계사 낀 고교 동창들 ‘깜찍한 살인 설계’

외제차 할부금 마련하려 공모...3명이 연인·살인·도주역할 분담 여성 사인 뒤 ‘5억 보험’ 들게 하고 보험금 수령 위해 계속 교제 이벤트 미끼로 화순서 살인 시도...여성 극적 탈출로 3명 검거

외제차 할부금과 생활비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살인을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시도한 20대 고교 동창생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애초 여성을 살해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범행 대상을 몰래, 이들 중 한명은 채팅방으로 여성에 접근해 ‘연인 역할’을 했으며 또다른 한명은 직접적인 ‘살인 역할’을, 나머지 한명은 ‘도주 역할’을 맡았다. 살인은 미수에 그쳤지만 3명이 일면식도 없었던 여성을 2개월 여 동안 사귀는 척 하며 속인 뒤, 범

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화순경찰은 11일 보험금을 타 낼 목적으로 20대 여성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보험설계사 A(20)씨와 고교동창 B·C(20) 등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일 밤 11시에 화순군 북면의 한 펜션에서 D(여·2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A씨는 채팅방으로 순천지역에 사는 D씨를 만난 뒤,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애인 형세

를 했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보험설계사인 A씨는 D씨에게 사망보험 가입을 권유했고 A씨는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으로 지정했다. 보험가입 후 지난 9일 A씨는 D씨에게 여행을 가자며 화순군 북면의 한 펜션으로 유인했고, 자신이 준비한 선물은 펜션에서 약 550m 떨어진 곳에 있다며 찾아오라고 말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D씨는 펜션 밖으로 나가 A씨가 말한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B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렸다. 이후 D씨는 B씨가 수차례 휘두른 흉기가 부러지면서 도주했지만 다시 붙잡혀 목을 찔리는 등 위기 상황에 처했으나 격렬히 저항한 끝에 다시 펜션 주변으로 도주, 인근에 있던 사람들에게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D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이튿날인 10일 새벽 3시경 범행 장소인 펜션

에서 A씨를 검거하고, A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B씨를 체포했다. 순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이 성공하면 차를 가지고 오기로 했던 C씨는 순천에서 화순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 바퀴에 이상이 생겨 순천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이날 범행이 미리 준비한 살인 공모였다고 진술했다. 붙잡힌 A씨 등 3명은 순천지역 고교 동창생으로 외제차 할부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올 중순 살인을 공모했다고 자백했다. 이들은 살인후 5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아 나눠 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아우디와 렉서스 등 두대의 외제차 할부금이 필요했으며 무직인 B·C는 단순히 생활비 마련이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회식자리 부적절 신체 접촉 피해신고한 직원 해고 잘못”

전남대 산학협력단 처분 부당 판결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 피해를 신고한 직원을 해고한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신봉매)는 A씨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연말 회식에서 상사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남대 인권센터에 신고했으나 2차례나 기각당했다. 전남대측은 그러나 노래방 폐쇄회로 TV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내세워 A씨 신고를 허위로 판단하면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고 처분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여러 차례 A씨의 손을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CCTV와 다른 내용이 일부 있지만, 이는 의도치 않은 일을 겪어 당황한 원고가 3주 가까이 지나 신고하면서 착오한 것으로 보일 뿐 A씨 진술이 허위라고 B씨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도 A씨가 B씨 사이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추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A씨가 B씨의 행위로 인해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식문화 개선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한 전남대 산학협력단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극단적 시도로 매일 100명 응급실행

올 상반기 1만 8213명 달해

자해나 자살 등 극단적인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올해 상반기에만 1만 8000여명으로 하루 평균 약 100명 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비례)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해·자살 시도자는 1만 82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총 3만 4905명으로 직전 해인 2019년(3만6336명)에 비해 3.9%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기자 mskim@

지난해 응급실 내원 환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28.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30대(15.1%), 10대(12.8%) 순이었다. 20대 비중은 2016년의 19.6%에 비해 9.1%포인트 올랐다. 지난해에는 모든 연령층이 직전해에 비해 감소했지만 20대는 유일하게 14.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21.1%나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2만 1176명, 남성이 1만 3729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5배가량 높았다. 한편 지난해까지 이러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인원은 총 1만 3195명이다. 전년보다 604명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셈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진도개 보호법 만들어 달라” 국민청원

동물보호단체 체계적 보존 촉구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도개를 보호하고 관리할 방안으로 새로운 ‘진도개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새로운 진도개 보호법 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11일 오후 6시 기준 1만 4200여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들은 기존의 진도개를 관리하는 법률들이 진도개의 보존·보호가 아닌 증식과 보급 확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제보를 통해 진도군 내에서 불

법적으로 운영되던 식용 목적의 농장성 견 58마리 가운데 11마리에서 전자칩이 발견됐으며, 전자칩이 등록된 11마리 중에 4마리가 천연기념물 진도개이며 나머지 7마리는 진도개 미심사견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의하면 천연기념물의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는 문화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완료되기 전까지도 문화재청과 진도군청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동물단체의 주장이다. 이를 계기로 동물보호단체는 진도개를 체계적으로 보호·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진도개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 낮춰야” 경찰청·지자체·시민 참여 토론회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경찰청과 지자체, 시민들이 참여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영교 의원은 “현행 오토바이 소음 기준이 105dB이다보니 오토바이 튜닝을 통해 103dB수준으로 교체하는 일이 허다하다. 주거지역 소음 기준인 68dB(주간), 58dB(야간)과 격차가 커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아

울러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이날 오는 연말까지 이륜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오는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후면번호판 무인 단속 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소음 단속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과 폭주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가을비에 젖은 교정 가을비가 촉촉히 내린 11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교정에 가로수들이 울긋불긋 물들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보이스피싱 자수 받는다

검·경, 최대한 관용 방침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개월간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피단체 가담자의 자수를 받는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조직에 대한 주요 증거를 확보할 것”이라며 “총책과 조직원을 검거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수자에 대해서는 범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구속 수사하거나 기소유예·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경찰청과 검찰이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관련 자수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수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고해도 본인이 한 것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자수·제보하려는 사람은 관할을 따지지 않고 전국 경찰관서·검찰청에 출석하거나 관련 내용이 담긴 서면을 내면 된다. 경찰청 자수받은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보낼 때 ‘신고 기간 자수 사건’이라고 명시해 양형에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과 협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개> *QR코드는 법원경매정보 웹포털에 접속하십시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아파트]					
2020타경 71599	1	남구 광복마로4길9-1, 101동 14층 1409호 [진월동, 진월1차한신아파트] 59.98㎡ [전유부분대지권표시, 토지표시: 남구 진월동 267대 10556㎡, 대지권종류: 소유권, 대지권지분: 21.0989/10568.62]	아파트	147,000,000 147,000,000	
2021타경 4961	1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17-6, 6층 601호 [창암동, 에이엠스타사] 32.3203㎡ [2021.7.21자현항조사보고서상관리비약백만원경도미납]	아파트	94,000,000 94,000,000	
2021타경 68767	1	광산구 우산로95번길60, 104동 6층 606호 [우산동, 대광로제비방] 84.6990㎡	아파트	300,000,000 300,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21타경 70388	1	담양군 청평면 의랑리 78-7 215㎡ 제시외가추 등 31.4㎡ 담양군 청평면 보평길 53-15 [제1종] 단층 83.28㎡	대 대	183,946,600 183,946,600	일괄매각, 제시외가추 포함 담양군 청평면 의랑리 78-2' 일부소재 포함
[대지/임야/전답]					
2021타경 2309	1	북구 두암동 453-8 487㎡ 동소 453-29 26㎡ [물건번호1: 공유지조속회 1726775/5130000지분전부, 토지인매각, 매각제외제외건물있음[경정평가서참조]]	대 대	214,120,100 214,120,100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2021타경 66822	1	장성군 활룡면 아곡리 신39 24624㎡	임야	238,852,800 238,852,800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1타경 69043	1	화순군 능주면 내리 103 932㎡ [연고미상분묘1기와비석소재, 인접지와경계분묘없이사용중]	전	6,990,000 6,99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1타경 69173	1	나주시 노안면 계림리 산42-4 2850㎡ [원형근1/3지분, 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수목포함]	임야	24,700,000 24,700,000	연고미상분묘2기소재, 지분매각
2021타경 70296	1	장성군 북하면 중평리 산66-2 9128㎡ [공유자집채만 1/5지분전부, 연고미상분묘1기소재]	임야	4,746,560 4,746,560	지분매각, 공유지우선매수권1회로제한
[자동차, 중기]					
2021타경 68880	1	사용본거지: 인현 연수구 함복로67번길 16-28 16-28, 202호 [연수동] 등록번호: 11루2050 차량: 쏘나타 연식: 2015 [말뚝번호판없음] [광주지방경찰청에서 폐기처분]	자동차	9,500,000 9,500,000	보관: 관산구여대길222-1, 송암주차장
2021타경 70395	1	사용본거지: 전주시 완산구 고시정5길 24-1 [서신동] 등록번호: 32누7243 차량: 말리부2.0디젤 연식: 2014	자동차	7,000,000 7,000,000	보관: 관산구신정로156, 현대주차장
[기타]					
2021타경 68903	1	영광군 영산면 상계리 218-1 2089㎡ [매각제외제외건물있음, 수목포함]	토지	43,287,800 43,287,800	토지인매각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과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하여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대상지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한 때에는 매수신청보통공고를 변경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상에 산입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정상매각이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지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이행에 매수본공공의 미납으로 실패하는 경우 그 공유지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이행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공약으로 본다.
3. 매각결정일: 2021. 10. 26. [화] 10:00
4. 매각장소: 2021. 11. 2. [화] 16:00
5. 매각방법: 광주지방법원 입찰방법

① 입찰방법에 비하면 가압입찰표에 사인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고매각가격의 1% [100만원]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입찰의 자기인수료 또는 관공를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업체에서 제공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종료되면 관공로 개봉을 실시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사용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사용자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 지분위대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사용자에 대하여 매각결정일 이후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간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정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간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 취소한다. 다만, 매각허가일로부터 지정된 날의 3일만 전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분양자, 이행을 납부하면 대금납부에서 자유하며, 따라서 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결정을 납부한 후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권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본제외의 지상권과 지압권 등 등록세상수필확인서 및 등본제외수필통지지를 첨부하고, 국민취약계층발생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발원처 제출한 날부터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준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의사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이다.
8. 주의사항
① 매각의 주체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전 부주특별전입신고와 매각이 거주하고 있는 입찰자이나, 사업자특별신청을 받은 입찰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이다.
② 일반인들과의 계약 체결을 위하여 매각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과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경쟁참가자의 사본 등을 우편발행 인사장(신청서)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필요한 정보를 알선 후 입찰정보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이다.
④ 입찰보증에 나오는 금액은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과 입찰보증금도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이다.
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권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본제외의 지상권과 지압권 등 등록세상수필확인서 및 등본제외수필통지지를 첨부하고, 국민취약계층발생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발원처 제출한 날부터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준다.
⑥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로 매각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에 소망하는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없음이다.
⑦ 매각의 주체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전 부주특별전입신고와 매각이 거주하고 있는 입찰자이나, 사업자특별신청을 받은 입찰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이다.
⑧ 일반인들과의 계약 체결을 위하여 매각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과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경쟁참가자의 사본 등을 우편발행 인사장(신청서)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필요한 정보를 알선 후 입찰정보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매각일 및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이다. 주소: http://www.courtaction.go.kr [검색구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과도한 정보에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행위를 위하여 따로 제한한 것으로서, 속시무시 다른 내용 이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결과에 신청이나 항고, 대금지급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 반드시 법원에 관하여서 기재된 매각결과에 공고나 비자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열람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12.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정필